

발전노조 총파업 투쟁 교양자료

보내는 이 : 10기 한총련
받는 이 : 각급단위 학생회
내용 : 발전소 매각, 알고 보면 매국입니다 / 각종 성명서, 기자회견문, 신문기사

발전소 매각, 알고 보면 매국입니다!

1. 전력산업 구조개편 - 발전소 매각 : 알고 보면 해외매각.

정부방침대로 5개 발전회사를 매각하면, 1개사당 자산규모가 2조~4조원(5개사를 합계하면 총16조원)이나 됩니다. 재벌이라도 제 돈으로는 인수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필연적으로 발전회사들은 국내독점재벌이나 외국의 에너지독점자본에게 인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당국은 공기업을 "개혁"하기 위해 발전소를 매각(민영화)한다고 말하지만, 그 실상은 알고 보면 발전소를 거대 독점재벌과 외국의 에너지 재벌에게 매각하는 정책입니다.

2. 한해 1조7,000억원이나 흑자를 내는 한전 : 재벌과 해외자본에게 넘겨주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국민의 재산.

1998년의 한전의 당기순이익은 1조1,017억원이고 1999년은 1조4,679억원이며, 2000년에는 1조7,000억원의 흑자를 내는 등 매년 흑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1조7천억원에 달하는 흑자를 내는 우량공기업을 분할매각하여 재벌과 해외자본에게 나눠먹기 방식으로 넘겨주는 것은 너무나 부당합니다. 알트란같은 국민재산을 제벌과 해외자본에게 헐값으로 나눠주는 것은 역사에 죄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3. 발전소의 분할매각 : 전문 연구자들도 모두 반대하는 "얼처기 공기업개혁".

한국산업경제연구원, 안전회계법인, 삼원회계법인 소속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전의 경영진단반은 1994.7월부터 1996.6월까지 2년간에 걸친 연구결과, 한전의 구조개편 방안으로 우선 사업부별 독립재산을 실시하되 이후 10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민영화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서울대 기초전략공학공동연구소'에서는 1997.6월부터 1998.7월까지에 걸쳐 연구한 결과 한전의 분할매각방안을 명백히 반대하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막연히 일방론적으로 공기업민영화의 이점을 주장하는 교수들을 제외하고는, 한전과 전력산업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전문가들은 모두 발전소의 분할매각 방안이 올바른 구조개편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실증적 분석과 연구조사를 마친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정반대로, 밀어부치기식으로 강행하고 있는 정부당국의 발전소 분할매각 정책은 "누구를 위한 분할매각"입니까?

4. 정부당국의 발전소 분할방안

· 분할과 경쟁에만 급급, 전력기술의 발전에 역행하고 기술적 효율성을 파괴함.

· 지금이라도 분할매각을 일단 중단하고, 기술적 효율성이 유지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작년(2001년) 4월부터 이미 분할되어 있는 5개 발전회사방식은 전력산업기술이나 발전기술의 발전에 역행하는 방식입니다. 즉, 현재는 1개 발전회사당 석탄발전소 1~2개, 유류발전소 1~2개, 천연가스발전소 1~2개, 복합발전소나 양수발전소 1~2개씩 골고루 안배하여 분할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발전회사를 3개 체이나 외국 자본에게 골고루 나눠주는데는 효과적일지언정, 기술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발전기술의 발전방향에 역행할 뿐 아니라 기술경제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발전회사들이 모든 종류의 발전에 대한 기술을 갖춰야 하고 또 모든 종류의 시설과 부품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기술의 전문성 확보에 역행하고 기술적 효율성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굳이 분할해야 한다면 석탄 발전소는 석탄발전소끼리, 유류발전소는 유류발전소끼리, 또 천연가스(LNG)발전소는 천연가스발전소끼리 묶어서 그룹명하는 것이 발전기술의 전문화를 위해서든, 부품의 공유를 통한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서든 필수적입니다. 그런데도 이와 정반대로 기술경제의 효율성이 파괴되는 방식으로 추진된 이유는, 발전연료별로 연료가격의 차이때문에 발전단가가 달라지는 현상황에서 억지충합식의 경쟁체제를 만드는 데 급급하다보니, 각 발전회사에게 각 연료별로 골고루 안배하는 방식의 그룹명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전력산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은, 현재와 같이 법인체를 분할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기술경제의 효율이 파괴되게 되므로 이런 방식은 피하는 대신, 같은 법인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 사업부별로 독립체제로 가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력산업의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발전회사를 분할매각하는 기존 정책을 일단 중단하고, 기술적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5. 발전소 분할매각의 실상 - 엄청난 특혜 :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의 사례

지난 2000년7월에 이미 매각이 완료된 안양부천 열병합 발전소의 경우를 살펴보면 발전소 분할매각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기 돈은 제대로 투자하

지도 않고(자본금 782억원), 대부분 차입금으로 발전소를 인수한 실상을 보면 놀라울 정도입니다. 즉, 총 7,710억원의 매각대금 중 매각대금의 64%인 총 4,940억원을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특별성 차입금으로 조달하였다고 합니다. 그해 높고는 LG칼텍스정유와 미국제 초국적 기업인 테스코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인 LG파워측은 위 차입금의 이자는 소비자들에게 전가해서 막대한 이윤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열지파워는 지난해 12.11. 싱가포르 국영전력회사에 1,815억원의 지분을 매각하여 경영권이 해외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역시 우려했던 바대로 요금인상의 문제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매각 당시 한전에 인정되고 있는 투자보수율(1999년의 경우 4.7%)의 2.5배 이상에 달하는 최저 12-15%의 투자보수율을 인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바로 매각된지 얼마 되지 않아 난방요금 인상으로 가시화되었습니다. 즉, 경기도 평촌, 상봉, 중동 신도시와 인천시 부평, 계산지역 등 17만여 가구 아파트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LG파워는 2001년 1월 난방비를 9.13% 올린 후, 7월에 또다시 난방비를 26.8% 인상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특혜를 주며 알트란같은 국민의 재산을 제벌과 외국 독점자본에게 헐값으로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 발전소 매각의 진짜 모습입니다.

6.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발전소 매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국민의 공개토론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 형성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매각 결정과정은 소수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한 후 이에 따라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미리 분할매각이라는 정책결정을 해 놓고 사실상 요청위로 개편된 1-2차례의 형식적인 토론회를 거친 것 이외에는 국민적 합의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국이 발주한 전문가들의 연구용역결과에도 상반되게 막무가내로 발전소 분할매각이 강행되고 있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부당국은 발전노조의 매각철회 주장에 대해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제작년(2000년) 12월 국회에서 제·개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중 세가지 법률은 민영화 환경 조성을 위한 예비입법이자 한전 분할에 관한 내용일 뿐, 직접적으로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부칙에 법 시행 후 1년의 준비기를 둔다는 것만 못박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당국은 이런 입법내용을 무시하고 마치 국민적 합의과정이 이미 완료되거나 한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 해결방안 : 발전소 분할매각을 일단 중단하고, 노·정·공익 추천에 의한 전문가들의 공동조사연구를 통한 올바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위와 같이 본질적인 가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발전소 분할매각은 일단 중단되어야 합니다. 올바른 구조개편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정·공익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공동연구단을 구성하고, 여기에서 실증적인 조사연구를 거쳐서 마련된 구조개편방안을 공개하여 국민적인 토론과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저대사인 발전소 매각은 일단 줄속으로 추진되고 나면 나중에 다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줄속강행을 일단 중단하고 올바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2002. 3. 5.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전화 : 02-794-5923, 팩스 : 02-776-5291, 홈페이지 : http://gong2jinbo.net)

발전소 매각 철회! 단체협약 체결! 해고자 원직복직! 발전소 매각 저지와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투쟁의 이유와 방침 (2002년 2월)

- | |
|---------------|
| <글 순서> |
| 1. 현황 |
| 2. 발전노조의 요구사항 |
| 1) 발전소 매각 철회 |
| 2) 단체협약 체결 |
| 3) 해고자 원직복직 |
| 4) 인력 충원 및 증원 |
| 5) 경쟁비 도입 철회 |
| 3. 투쟁 방침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0 진성빌딩 202호 / 전화 02-3456-8055 팩스 02-3456-8159

1. 현황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한전에서 발전부문이 분리되면서 발전5개사 (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된 5600여명 규모의 소산 별 노동조합입니다. 우리는 전국의 화력발전소에서 전기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발전노동자들입니다.

한국경제의 에너지 동맥으로써 국민의 세금과 전력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전력산업이 정부의 전력산업구조개선 계획에 의해 이제는 한낱 외국자본과 국내계열의 이윤의 도구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국민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요금인상이라는 부담을 줄 수밖에 없으며 전력산업 종사자들에게는 생존권 박탈이라는 고통을 안겨줄 뿐입니다.

소수의 이윤추구를 위해서 국민과 발전노동자들이 희생되는 이러한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막기 위하여 우리는 지난 '99부터 전력산업 구조개선 저지투쟁에 총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12.23 전력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총의를 무시하고 과업을 철회함으로써, 12.23 마침내 '전력산업구조개선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전노동자들은 이러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후 자회사 매각만은 막겠다는 일념으로 조합원 총의로 전력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새롭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을 건설하여, 발전소 매각을 철회하고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확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전노조는 조합원 총의로 건설하여 2001. 7.24 노동조합 설립발증을 교부 받은 합법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단체협약 승계를 거부하고, 조합활동마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노조가 정부의 발전소 매각 계획에 대한 강력한 저지투쟁을 우려하여 사전에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2002. 1.16 산업자원부 주최 발전소 매각을 위한 공청회는 정부가 매각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순에 불과합니다. 이 토론회는 발전소 매각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사안을 가지고 의견을 달리하는 각계 각층의 참여 속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론을 갖고 절차상의 명분만 가지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에 제동을 걸고자 공청회를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과 발전노동자들의 참여가 배제된 어떠한 발전소 매각에도 단호히 반대합니다.

1997.12 IMF 위기관리 하에서 정부는 외국자본의 요구에 굴복하여 공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전에도 구조조정이 단행되어 6,000여명의 인원감축이 단행되었고 일부 사업은 위주 용역화 되었습니다. 또한 전력설비는 증가되는데 비해 정원은 줄고 5333코대 근무자 4333코대로 전환되어 발전노동자들은 강화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지 않고 발전자회사들은 경쟁적으로 인원축소를 계획하고 현장봉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10여 년간 현재 2배의 전력설비의 증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전력설비에도 불구하고 인원충원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자연감소된 인원마저 증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안가서 발전노동자들은 휴일 없는 3333코대 근무를 해야 될 지경이 됩니다. 현재에도 정원에 모자라는 인원으로 발전노동자들은 노동에 지쳐 있습니다.

전기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전력산업을 자본의 증식도구로 전락시킴으로써 빚어진 2001. 1.18 켈리포니아 단전사태는 실리콘벨리의 중심부 공장과 사무실을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분적인 현상입니다. 발전노조의 너무나도 정당하고 기본적인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 정부와 회사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발전소 매각 저지투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민 생존권과 발전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파국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회사의 책임 있는 행동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 우리의 요구

1) 발전소 매각 철회

가. 매각추진 경과

- '94.7~'96.6 한국전력공사 경영진단 실시
진단결과 : 민영화는 구조개선 개시 10년 후부터 필요에 따라 추진
- '98.8 전력산업구조개선 계획 발표
- '99.1.21. 전력산업구조개선 기본계획 확정 발표
- '99.6~'12 제15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법안의 제·개정을 추진했으나 심의보류
- '00.12.23. 전력산업구조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
- '01.4.2. 발전부문 분리
발전회사 6개 설립 (수원자력1개사, 화력 5개사)
- '01.4.28. 전기위원회 설립
- '01.12. 상반기 1개 발전자회사, 올해 2개 발전자회사 매각 방침 발표

나. 매각의 부당성

□ 전기요금이 인상됩니다.

국회 김병림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구조개선 비용으로 인하여 21%~38%의 상승요인이 발생하며 민영화될 경우 두 배 이상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치루더라도 발전소를 매각하려는 이유는 정부가 발전노동자의 생존권과 국민의 공공적 편익증대는 안중에도 없이 국내의 자본의 위기를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그들의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 전기공급의 불안정성이 확대됩니다.

2000.1 제5차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5년까지 현재의 두 배인 총 1067기의 발전설비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 계획수립에서 준공까지는 3,000억원 내지 2조원의 재원과 10년 이상의 건설기간이 필요합니다. 민간 사업자가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막대한 재원과 투자회수기간을 감수하면서 저비용으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단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부담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보조하지 않을 경우 민간사업자는 건설을 회피,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 표1 - 발전소 건설 소요기간 >

구 분	원자력 (1,000MW)	석 탄 (500MW)	LNG 복합 (900MW)	석 유 (500MW)	양 수 (300MW)
총 소요기간	155개월	122개월	102개월	120개월	141개월

< 표2 - 발전소 총 건설비 >

구 분	원자력 (1,400MW)	석 탄 (800MW)	LNG 복합 (450MW)	석 유 (500MW)
총 건설비	2.1조원	8,800억원	2,565억원	4,500억원

□ 미국 켈리포니아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구조개편이 전기요금을 인하고 서비스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켈리포니아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파르러던 주 중 75%이상이 계획을 연기 또는 백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 현재 전력산업이 큰 문제가 없는 한 개편하지 말 것.
- 설비여유가 없으면 개편하지 말 것.
-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 이상으로 구조개편을 밀어붙이지 말 것.
- 헬물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 것.
-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 발전회사의 욕구를 잊지 말 것.
- 시장규칙 실현전에 테스트 할 것.

□ 안양·부천 복합화력발전소 사유화의 경과와 교훈

2000.6.22 한전, 지역난방공사는 LG POWER(주)에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 및 설비비를 7,710억원에 매각하였습니다. LG POWER(주)는 컨소시엄 합작법인으로 LG화력 52%, 삼성 26%, 테크노 25%, LG탈가스 및 국등도시가스 24.5%를 출자로 설립한 회사로 설립자본금은 7824천만원에 불과하며, 인수가금의 대부분인 5,200여원을 산업은행의 대출 또는 회사채로 사들였습니다.

경기도 평촌, 신촌, 중동 신도시와 인천시 부평, 계산지역 등 17만여 가구 아파트에 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LG파워는 지난 1월 난방비를 9.13% 올린 후 7월에 또다시 난방비를 26.8%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열지파워는 지난 12.11 싱가포르 국영전력회사에 1,815억원의 자본을 매각하여 경영권이 해외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 설비증가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계속 감축되어 노동강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97년부터 설비는 16% 증설되었으나 오히려 인원은 15% 감축되었다. 이로 인해 작업환경을 고려한 석탄발전소의 교대근로가 5조 3코대에서 4조 3코대로 전환하였으며 이것도 모자라 보직을 축소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일근자들도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표3 - 설비용량 대비 정원감축 현황 >

연도 구분	198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6
	설비용량	9,391	31,791	35,722	40,534	43,261	44,427
정 원				39,454	35,689	34,850	34,306

2) 단체협상 체결

4.2 발전부문이 분사되면서 노동조합도 분리·설립되었습니다. 지난 3.21 한전과 전력노조가 맺은 전직협정서 제2조에 의하면 "한전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및 그와 관련된 제규정이 그대로 승계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단체협약의 승계를 거부하고 조합활동을 위한 전입활동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해변에 산재된 37개 사업장, 5,700여 조합원의 고용과 권리, 노동조건 개선은 위한 활동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단휴 상태에서 단협이 체결되지 않는 한 발전노동자들의 권리는 회사에 의해 시시각각으로 침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빠른 시일 내에 조합원의 고용과 권리를 지키고 자유로운 조합 활동을 보장하기위하여 조속한 단협 체결을 요구합니다.

□ 단체협약 주요 요구사항

- 조합활동 보장 : 전입차 확보, 홍보활동 보장, 조합간부 정계 사전협의, 월2시간 조합원 교육시간 확보
- 조합원의 인사, 전직, 파견, 배치전환은 조합과 사전협의
- 조합원과 관련된 예산, 정원, 조직의 증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조합과 협의
- 인사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
- 정계상사위원회의 노사 동수 구성, 레그의 경우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고용안정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
- 노동생산성과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실업금리 확보
- 임금, 복지 등 제반사항 변경 시 사전에 노사협의
- 주40시간 노동시간 단축
- 초과, 휴일, 야간 노동시간 실적급 지급 및 할증율 180% 지급
- 장기재직유가 확대 및 할증유급유가 부여
- 남녀평등과 여성보호
- 노동쟁의 시 신분보장, 대체근무 금지, 임금보장

3) 해고자 원직복직

조형활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동지들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노동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사회에서 격리되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해고 동지들은 발전노동자들의 권리쟁취를 위하여 싸웠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생존권을 가져갈 권한은 없습니다.

4) 부족인원 충원 및 증원

공기질 구조조정에 따라 '98년부터 4년간 이미 6,000여명이 한전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정부의 정원축소 계획에 의거 자연감소가 되어도 충원을 하지 않아 정원대비 현원이 189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태안5.6호기, 영흥1.2 건설 등 설비증대에 따른 인원증원도 없어 발전노동자들은 자기 몫의 두 세배 일을 하는 실정입니다.

< 표4 - 5개 발전자회사 현재 정원대비 현원 (01.6.5) >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계
정원	1,563	1,897	1,570	1,699	1,781	8,510
부족인원	-26	-41	-61	-29	-32	-189

5) 발전운전원 경쟁비 도입 철회

회사는 발전운전원들에게 경쟁비 실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발전회사는 운전권리를, 자회사인 한전기공은 보수업무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전기공 정비업무의 일부를 도입하여 운전원들에게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전기공의 인원을 축소할 뿐 아니라 발전운전원에게도 업무를 추가하여 노동강도를 강화시키고 안전사고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쟁비 도입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3. 투쟁방식

발전노조가 요구하는 「발전소 매각 철회, 단체협약 체결, 해고자 원직복직」 등 주요 요구 사항들이 정부나 회사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국가기간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투쟁일정에 맞추어 파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는 발전노동자들의 생존권뿐만 아니라 부의 재분배, 국민의 공공재 확보라는 측면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정부는 발전노조의 파업이 물고 울 사회·국가적인 파장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신중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1.27 발전노조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투본 일정에 맞춰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발전노동자들은 2001. 12. 3 파업철회와 그에 따른 발전자회사 분리라는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패배를 거울삼아 우리의 요구사항을 분명히 하고 전열을 가다듬어 왔습니다. 이제 정부와 회사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2002. 2. 15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발전·철도·가스 3개 노조위원장 공동파업 기자회견문」에서도 밝혔듯이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의 매각 철회”, “공공부문 인력감축 중단 및 인력증원”, “노동조건개선”, “노경교섭 실시”,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대국민 TV 토론회 실시”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공투본은 이미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2월 25일, 공동 총파업을 단행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에 발전노조는 발전·철도·가스 3개 노조위원장 공동파업 기자회견에서 밝힌 투쟁방침에 의거한 단체행동을 준수할 것을 결의하며 아래와 같은 투쟁방침을 제차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발전·철도·가스 3개 노동조합의 민영화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정부가 3개 노동조합의 요구 중 어느 1개 노동조합의 요구라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발전노조는 2월 25일공동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3개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정부가 성실한 대화와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느 1개 노동조합이라도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발전노조는 2월 25일(또는 즉각) 공동 총파업에 돌입할 것임을 밝힙니다.

둘째, 공투본 및 3개 노조의 핵심요구와 관련하여

공동요구인 1)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의매각 방침 철회, 2)공공부문 인력감축 중단 및 인력증원, 노동조건개선, 3) 공투본 교섭단과 즉각 노경교섭 실시, 4)국가기간산업 민영화에 대한 대국민 TV공개토론 실시 등의 요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발전노동자들의 요구는 전 노동자들의 공동요구이며,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회사는 깊은 이해를 바라며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합니다.

RSOI 훈련의 대북 침략적 본질

연합전사동원(RSOI) 훈련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 Integration의 약자

한·미 연합사 교관 하에 전사 한반도에 증원될 미 중전대의 4승, 대기, 전방비동 및 통합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민군간의 전사지원, 상륙작전지원, 동원, 연합방위억제정전관리, 전투력 복원 절차 등을 검토해 모의를 통해 실시하는 적외소 연습.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연극군은 국방부, 합참, 적군본부, 작전사단 부대가 참가하며, 미군은 연합군 사령부와 주한미군 사령부, 미 중원부대 등이 참가.

독수리(FOAL EAGLE) 훈련

한반도에서 전쟁작전에 의해 한·미간의 군사적 결의를 과시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태세 완비를 위해 1961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연합/합동 야외기동 연습

1999년의 독수리 연습은 한반도에 한·미 연합군과 미국 본토로부터 전격되는 증원전력, 연습지역 내 행정관서와 예비군이 참가하여 실시. 후방지역에 복속의 특수부대가 정복하는 것에 대비하는 연습으로 여단 쌍방 야외기동훈련, 연합상륙작전 연습이 중점적으로 실시.

또한 연습기간 중 부산/울산 광역시의 강남에서는 화생무핵전쟁 병행 실시하였다. 2부 연습에는 군단급 야외 기동훈련과 한·미 해병대, 해·공군이 연합상륙작전을 실시하여 한·미 연합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킴

RSOI 훈련과 독수리 훈련을 설명하는 2000년 국방백서의 일부이다.

한편 2001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는 RSOI 훈련과 독수리(FE) 훈련을 통합한 'RSO&I/FE 02'라는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장 제프리 밀러는 "한미 연합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개의 군사훈련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동신 국방장관 또한 작년 11월 19일 국회 예결위에서 '훈련의 질적 향상과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독수리훈련을) RSOI 훈련과 통합하기로 한' 것임을 밝혔다.

'RSO&I/FE 02' 훈련의 엄중성

규모와 내용에서 더욱 확대되었다.

이번 연습은 그동안 위기상황을 가정해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소규모 기동훈련에 치중했던 것과는 달리 전쟁발발 초기상황을 상정한 실전(實戰) 개념으로 실시된다.

RSOI 훈련은 지난 99년부터 미 증원전력이 한반도로 투입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한미연합사와 예하 부대의 컴퓨터망을 이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war) 게임'과 소규모 부대만 참가하는 기동훈련에 중점을 뒀 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국방부, 합참 및 미 태평양군사령부, 주일미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도 태평양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해외 미군 등 1만 여명이 참가해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전쟁발발 초기 상황을 가정한 실전과 동일한 수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통합훈련은 올해도 그치는 것이 이후 지속적으로 통합훈련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제프리 밀러 작전참모부장은 "통합된 훈련은 매년 1~2주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현 정세에서의 엄중성은 더욱 크다.

지난 해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발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비상경계령 발동으로 인해 '제6차 장관급 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남북 간에 긴장이 조성되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 미국은 또한 올해 들어서 이란·이라크와 더불어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다. 비록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전쟁 계획이 없다'는 발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이북 정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과 '내란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속내는 바뀌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이번 훈련의 엄중성은 5027-98 작전계획'과 연관지어 더욱 커진다.

'뉴욕타임스' 전(前) 기자였던 리처드 할로렌 씨에 의해 5027 작전계획이 개편된 사실이 처음으로 심도 있게 보도되었다. 할로렌 씨는 1998년 11월 14일 미국뉴욕대학의 '전쟁·평화·뉴스미디어 센터'에서 발행하는 인터넷자료 서비스 '글로벌 비트'에서 '북한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전쟁계획(New Warplan Calls for Invasion of North Korea)'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작전계획 5027-98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 정권을 소멸시키고 북한 전체를 한국 정복'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이전의 5027 작전계획은 다섯 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5027-98은 한 단계가 는 여섯 단계로 바뀌었다. 바로 이북 정권 후 점령지역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전 5027 작전계획은 미군 즉 추방 때문에 원산-청천강 선까지가 점령지역이었다. 미군이 원산-청천강 선을 고지한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참전 가능성 때문이었다.

미국은 93, 94년 핵위기를 겪으면서 '정권이 살아 있는 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대미 항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정권을 소멸시키는 방향으로 5027-98이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눈여겨볼 것이 98년 12월 국내 언론이 보도한 '한미연합사 내 연합군사령부 결성' 소식이다. 지금까지 한국군은 한국 헌법이 '한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영토로 한다'고 돼 있으므로 한미 연합군이 점령한 이북방은 '수복지구'라고 주장해왔다. 수복지구가 되면 이북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겸임사령관으로 한 계열령 적용지구가 된다. 반면 미군은 '점령지구'라고 주장해왔다. 이북 땅을 점령지구로 정의하게 되면 한미연합사 중심으로 군정이 실시된다. 군정하에서는 한미연합군의 헌병과 군 검찰이 이북지역 치안을 담당한다. 군정을 실시하려면 별도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연합한사사령부이다. 연합한사사령부 설치로 겸임지구-점령지구 논쟁은 점령지구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북땅에서도 자신의 영향력이 미치는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겠다는 미국의 의도이다.

'북한 붕괴'로인 미국의 대북 정책 선회와 통합훈련의 상관관계

- 99년 이후 우리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5027-98 작전계획은 지금도 변함없이 미국의 대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로 존재하고 있고 그에 기반해서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99 RSOI 및 군사전쟁 연습을 마치고'라는 논문에서 심중훈 소령은 99년 한미군사훈련의 성과로 맨 처음 언급한 것이 바로 '작게 5027-98 군사지원계획 개발간 및 작성된 계획을 검증하는 경기'가 되었다는 평가는 5027-98 작전계획이 지금도 유효한 계획이며 오히려 더욱 치밀해졌음을 보여준다.

이하 작전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99년 신동아 5월호를 참고하였음.

- 원문은 www.nyu.edu/globalbeat/asia/Halloran111498.html 참조

여기서 우리는 2002년 3월 7일자 시사저널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시사저널은 2월 22일 자 <동아일보>에 실린 마커스 놀란의 미국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과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 책임연구원 간의 특별대담 기사를 인용하며 미국이 '북한 붕괴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다는 것을 실었다. 현재 부시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과거 레이건 정권이 옛소련을 붕괴시켰던 경험을 이북에도 적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북한붕괴외도 시나리오'는 먼저 북에 대한 수사적 차원의 공격을 시작하고, 내년중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유도한다. 그 다음에 북의 고립과 붕괴를 위한 공작을 시도한다. 그 첫 번째 조치로 대북 지원을 중단한다. 그 다음 이북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을 거부하는 것을 둘러싸고 위기가 발생하면 미국은 이를 제재와 합의를 중단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결국 이북은 부시 대통령 17 달이나 혹은 27(재집권할 경우)에 붕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부시의 한·중·일 순방 이전에 이미 미국의 대북 정책이 '북한 붕괴 유도' 쪽으로 선회하였으며 △부시 행정부의 상층부 안에 이를 위한 특별팀이 구축되어 있고 △중양안보국(CIA) 등 정보기관이 이미 대북 공작에 들어가 있는 등 반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을 계기로 큰 물리자 라이선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린스펠드 국방장관, 제니 부통령을 축으로 하는 상층부 3인 외에 실무 차원에서 이들의 강경노선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3인의 존재가 있다. 라이선 보좌관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존 볼튼 국무부 차관, 린스펠드 장관 밑의 윌프루츠 국방부 부장관, 그리고 제니 부통령 밑의 루이스 리비 부통령안보보좌관이 그들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부시의 3국 방문 역시 '북한 붕괴 전략'에 대한 현상 확인인 것 같다고 말한다.

미국의 허무맹랑한 계획이 과연 미국의 공식 정책으로 되었는가 아닌가, 혹은 실현가능한가 아닌가의 논쟁에 앞서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현재 얼마나 위험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며, 3월에 전개될 'RSO&I/FE 02' 훈련이 미국의 이러한 '붕괴 정책'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촉식 있을지 모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기도 한다. 실제로 미국이 '대화 정책'에서 '붕괴 정책'으로 선회한 것은 작년 10~11월의 일이다. 이때 조·미 간의 물밑 대화 과정에서 북측이 작년 6월 미국이 제시한 대화 조건으로는 더 이상 대화에 응할 수 없다는 최종일장을 전달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는 이를 계기로 미국이 기존의 대화 기초를 잡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전한 바 있다.

예초 독수리 훈련은 매년 가을에 실시되어 왔다. 그런 독수리 훈련이 작년에는 실시되지 않고 연기되어 올해 'RSOI 훈련'과 통합된 것이다. 한미 연합사령부에서 독수리 훈련과 RSOI 훈련을 통합해 실시한다는 것을 발표한 것도 11월 7일의 일이다. ('북한 붕괴 정책'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던 시기와 통합 훈련 실시 발표가 이렇게 일치하는 것을 두고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미국의 각본에 따라 치밀하게 한국군을 통제하고 훈련시키겠다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음모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사건이 몇 가지 더 있다.

그 하나는 2월 27일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남북 간의 준비통제 및 재래식무기 감축 협상까지도 미국이 개입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는 한국군의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미국의 지배와 통제하에 두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한편 한국 국방부는 사거리 300km의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컴스(ATACMS) 111발과 발사대 29문을 4천여 원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2002년 1월 4일 발표이다. 도입되는 발사대와 미사일은 오는 2004년까지 전량화될 예정이다.

앞서 언급했던 할로렌 씨는 미군 장교의 말을 인용해 '미군은 첩보위성과 정찰기를 통해 인민군의 경도 입구를 알고 있다. 인민군이 가장 취약할 때는 지하에 있는 포를 꺼낼 때다. 이때 미군은 대규모 포격을 시도해 인민군 포를 매장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도 진지에서 나오는 인민군 포 공격에는 주한 미육군과 한국 육군의 보유한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ATACMS)이 사용된다. 에이태컴스 미사일은 GPS(위성을 이용해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로 유도되기 때문에 토마호크만큼이나 정확도가 높다. 한미연합군이 이북의 전역 남침 가능성을 무릅쓰기며 선제 공습을 강행한다는 것도 에이태컴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에이태컴스 미사일을 한국군이 직접 구입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정리해보자.

'RSO&I/FE 02' 훈련은 실전을 염두에 둔 전쟁훈련이다. 그리고 이 훈련은 5027-98 작전계획에 입각하여 전개된다.

현재 미국은 이북과의 '대화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 붕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11월달에 존 볼튼 국무부 차관의 '북한 생화학무기 보유설'에서 시작하여 최근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바로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입각한 수사 전개였다고 한다. 부시는 한국에 와서 이북 정권과 이북의 수위를 분리해서 상대하겠다는 발언을 하였는데, 그 발언 또한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서 나온 것이라 봐야 한다. 최근 3월 5일(미국 현지시간) 토머스 슈미츠는 미 상원 무기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들(이북)은 미사일 확산 1위국일 뿐 아니라 이는 재래식무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며 "바로 이 방식이 그들의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일은 주민 희생 속에서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며 언급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미국이 '북한 붕괴 정책'으로 선회하였던 작년 11월은 앞서 언급한 대로 존 볼튼 등 미국의 관료들이 대북 강경 발언을 하였던 시기이다. 또한 한미연합사령부가 작년 11월로 예정된 독수리 훈련을 연기하여 올해 3월 RSOI 훈련과 통합하여 'RSO&I/FE 02' 훈련 계획을 발표한 시점도 11월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미국은 이북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북이 생화학무기까지 개발하고 있으며 마약밀매·인권탄압을 자행하는 아주 못되덕은 나라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 국제 여론을 형성하려 한다. 그러면서 쌀을 포함한 대북 경제 지원을 차단하여 이북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현재 CIA를 비롯한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이북에 대한 공작을 실시하고 있다. '김정일 체제'를 전복할 수 있는 이북 내부에 정치세력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이북 정권이 전쟁을 도발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그에 대한 '억제'와 '대비'를 위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것도 각각 전개되던 훈련을 통합하고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실전을 방불케하는 훈련을 하겠다는 것이 'RSO&I/FE 02' 훈련이다. 미국이 얼마나 치밀한 각본과 계획 속에서 'RSO&I/FE 02'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지 치가 떨린다 못해 전술스럼까지 하자.

'RSO&I/FE 02' 훈련을 지지·파탄시키는 것은 미국의 전쟁 책동을 분석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고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데 있어서 사활적인 요구이다.

우선 이 훈련을 지지·파탄시키는 것은 전쟁까지 불사하며 한반도를 자신의 지배 하에 두려는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파탄낸다는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이 이후에도 지속된다면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쟁현경으로 내달릴 것이다. 북측은 2월 22일 의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 제도를 힘으로 변경시켜보려고 망상하고 있는 부시정부가러하는 상종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후 일관된 입장을 표방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아시아 행차 기간 미국 대통령 부시는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며 우리를 힘으로 압살해하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놓았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부시가 체지기(말하기) 좋아하는 대항살륙무기(대항살상무기)을, 기이요 하는 문제들도 다 다름없이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추구하며 반세기 이상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경제적으로 봉쇄해온 결과로 발생한 문제들'이라고도 비판하였으며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함부로 간섭하고 우리 제도를 헐뜯는데 대해서는 그가 실사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사의는 사람이든 정치가든 미국이든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를 힘으로 굴복시켜 저들의 울타리 안에 끌어들일려는 자들과는 우리 식대로 끝까지 강경대응해 나갈'

것이며 일단 우리를 건드리는 경우에는 무자비하게 짓통개버릴 것'이라며 미국의 대해 강력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3월 6일 북측의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적대적인 태도로 제네바합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며 '더 이상 일반적으로 합의에 임매이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아무리 초강경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북이 결코 미국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93, 94년의 핵위기 시기에 이미 확인되었다. 이북이 어떻게 나올 것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조·미 간의 합의사항들을 어기고 미국이 이렇듯 '북한 붕괴 시나리오'와 그에 기반해 전쟁 훈련을 감행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다른 아니다. 'RSO&1/FE 02' 훈련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은 미국의 한반도 전쟁 음모를 폭로·분쇄하며 한반도 지배 정책에 파열구를 내는 것이 된다.

다음으로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북아 나아가 전 세계에서의 평화를 지켜낸다는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중국, 일본 등 동북아 주변국가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제3차 세계대전으로 나아갈 것이다.

또한 이 훈련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은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것으로 될 것이다. 남과 북의 통일을 기쁘고 마고 우리 민족의 영구분단을 획책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이다. 전쟁까지도 불사하면서 미국은 우리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막아 나서고 있다. 이미 5027-98 작전계획이 수립되었던 98년부터 천명되었던 이러한 미국의 의지는 이번 'RSO&1/FE 02' 훈련을 통해 더욱 노출화되었다.

결론

미국은 93, 94년 전쟁위기보다 더욱 엄중한 전쟁 협정으로 우리 민족을 위협하고 하고 있다. 철축같은 어둠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고 했는가? 분명 지금 펼쳐지는 한반도에서의 전세는, 아니 미국이 만들고 있는 한반도의 엄중한 전세는 철축같은 어둠과 비장될 만 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둠이 걷히고 자질로 새벽이 오는 자연의 현상과는 다르게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그 어떤 현상, 발전도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미국이 만들고 있는 초긴장 전세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을 미국에 내맡기고 싶지 않지만, 아니면 우리 민족 주체적인 힘으로 개척하며 살 것이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다 하겠다.

우리에게는 6·15 공동선언이라는 단결의 보검이 있으며 그렇게 승리하였던 2001년의 경험이 있다. 부시의 방한을 저지하고 한반도에서의 평화를 우리 민족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의지로 단결하여 투쟁하였던 우리 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번 과시할 때이다.

RSOI훈련의 대북 침략적 본질2

- 한-미연합전시중립훈련은 대북 핵선제 공격 훈련인

팀스피리트 훈련의 부활 1 -

김서원 / 한국비권연구소 상임연구위원

오늘(3월 21일) 드디어 한미연합전시중립훈련이 시작되었다.

한편 3월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이북, 러시아, 중국,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 7개국에 대해 핵선제공격계획을 마련할 것을 미 백악관이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오는 21일에는 한미연합전시중립훈련과 독수리훈련이 통합되어 진행된다고 한다.

대북군사공격, 핵공격 계획이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실천단계로 접어들면서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반도를 물결치고있던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와 지구와 통일을 향한 우리 민족의 발걸음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앞서 인터넷을 통해 발표되었던 "한미통합 군사 훈련의 대북 침략적 본질"에서는 미국의 대북핵선제공격계획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 시기와 더불어 엄중한가에 대해서 다루었다. 지금은 앞서 발표된 글의 후속편으로서 미국이 지난 50여년간 핵무기를 어떻게 배치해왔으며 이북에 대한 핵선제공격훈련을 어떻게 벌여왔는가를 들여다봄으로써 오늘 시작된 훈련의 침략적 본질을 상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씌여졌다.

이 글은 순서는 아래와 같다.(이번 글에서는 팀스피리트 훈련의 규모까지 다루었으며 나머지는 2'3일 내에 완성될 예정이다.)

1. 한반도에서 핵무기 배치의 역사

- 1) 미국의 핵무기는 한국에 언제 배치되었는가?
- 2) 핵무기를 갖지 않은 이북에 대한 미국의 핵선제공격 정책

2. 한반도에서 미국이 벌였던 대북침략전쟁 훈련의 역사

1) 팀스피리트 훈련의 역사

- (1) 팀스피리트 훈련은 언제 왜 시작되었나?
 - 전쟁놀이할 놀이터가 사라지고 있었다
 - 베트남에서 뿔뿔하고 이북에 화풀이; 이북을 핵무기로 선제타격하라!
- (2) 팀스피리트 훈련의 규모
- (3) 팀스피리트훈련의 중단과 변형

2) 90년대 대북 침략 전쟁 연습은 어떻게 촉절되었는가?

3. 부시에 의해 부활하여 실천단계에 들어서 있는 대북침략계획

1. 한반도에서 핵무기 배치의 역사

흔히 **한반도의 핵문제가 이북의 핵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인 것처럼 알고 있을 수 있다.** 물론 세월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런 인식이 상당히 불식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 속에서 미국중심의 시각, 사대주의적 관점에 근거한 이런 인식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진실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

1) 미국의 핵무기는 한국에 언제 배치되었는가?

미국 정부는 미국의 핵·미사일 무기의 이남 배치를 추진하기 위해 경전협정이 발표된지 4년 뒤인 1957년 5월 22일 경전협정 제2조 12(d)항을 일방적으로 폐기한다고 선언한다.

이 항은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 항인가? 알아보도록 하자.

"경전협정 발효 후 Korea의 국경 밖으로부터 반입이 허용되는 무기는 전쟁 기간에 파괴·파손·손모 또는 소모된 작전용 비행기·장갑차량·무기 및 탄약, 동일한 성능과 동일한 유형의 것으로 하여, 그 수는 1:1로 교환하는 기초위에서 교체할 수 있다.

한국전쟁 중 핵무기와 (핵)미사일은 쌍방 간에 사용된 바 없다. 한반도의 남과 북 어느 쪽에도 들어온 일이 없었다. 그런데 미국이 경전협정 제2조 12(d)항의 일방적 폐기를 중국과 북측에 통고한 것은 핵폭탄과 핵미사일을 아무런 제약없이 남한에 배치하기 위한 신행초치인 것이다. 북측과 중국은 이것이 경전협정위반임을 규탄했다.

경전협정 제4조 6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본 경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조선·중국·미국)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

미국은 협정 조건 3년 뒤부터 이북을 공격목표로 하는 핵폭탄·핵탄두·핵지뢰·핵배낭, 핵미사일 등 각종 핵무기 수백개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미국은 58년 초 '어네스트 존' 미사일 부대, 핵포병대 '벤트릭 사단(280발의 원자포 보유)'을 한반도에 주둔시킨 사실이 93년에 미국무부가 발간한 포린 릴레이션즈 23호(55~57년도 비밀해제 외교·국방문서 기록집)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리고 59년에는 주한 미 공군에 핵탄두를 장착한 마다모 미사일을 배치해 대대적인 핵전쟁 훈련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국 내의 핵무기 배치 상황에 대해 미국 정부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NCND)" 핵비밀주의를 보여왔다. 그러나 91년 9월 27일 미국의 전 대통령 부시의 한국에서 전술핵무기 철수 선언(당시 남북합의서가 채택되고 남북 비핵화 선언의 화해 분위기 속에서 나온 선언이었다.)으로 그동안 확인을 거부해왔던 한반도 내 핵무기 배치가 사실이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91년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철수하기 이전까지 미국은 남한내 미군 기지에 약 1720여 개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한반도 1백평방킬로미터(경기도 수원시에 해당하는 넓이) 당 한 개 씩 혹은 동해에서 서해까지 200m당 하나씩 핵무기가 배치된 셈이다. 이는 핵무기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네 개가 넘는 밀도로 세계 최고라고 한다. 파괴력 면에서도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낼 수 있는 히로시마급 핵폭탄의 1700배에 해당하며, 1억7천만 명을 살상할 수 있는 위력인 것이다.

미국 대통령 부시의 '전술핵무기 철수 선언'으로 이런 핵무기들이 공식적으로는 한국에서 철수된 것이지만 월간 말 92년 8월호 보도에 따르면 전술핵무기인 핵탄두 장착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로스앤젤레스"와 "스터전" 두 종류의 핵추진 공격용 잠수함이 진해항에 여러 번 출입했다는 것이다. 이들 탄도미사일 탑재 핵 잠수함 한 척에 실린 핵무기만으로도 이북의 주요도시를 괴멸시킬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미국의 전술핵이 철수되었다고 해도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는 한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와 미 해군 태평양 함대가 보유한 막강한 핵무장은 여전히 이북에 대한 위협인 것이다.

소련과 중국의 핵·미사일은 이북에 없었다.

이처럼 한국땅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 배치는 경전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른바 '전쟁억력학' 혹은 이른바 '북의 대답도받 방어수단'이 아니라 핵이 없는 북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미국은 실제로 북에 대해 어떻게 협박을 해왔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2) 핵무기를 갖지 않은 이북에 대한 미국의 핵선제공격 정책

미국은 과거 세계의 45개국과 군사적 방위협정을 맺고 있다. 이들 피보호국들에 대한 보호 의무는 최종적으로 그들의 가장적(가져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 중국, 조선, 쿠바 등)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이들 가장적국들에 대한 미국 핵무기 사용의 일반원칙은 '핵무기 대 핵무기'였다. 다시 말해 가장적국 핵무기를 사용하면 핵무기를 쓰겠다는 정책이었던 것이다.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바르샤바 동맹군과의 일반원칙도 '재래식 무력 대 재래식 무력'이었다. 특히 1972년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과 비르샤바조약기구에 안보협력협정이 체결된 후는 미국의 핵무기와 전략미사일은 사실상 그 용도를 상실한 셈이다.

그런데 이 핵 일반원칙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국가가 북한이었다. 미국은 이란, 이라크, 쿠바, 수단, 리비아 등 미국이 규정한 '강제국가'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조선에 대해서 '재래식 무기 대 핵무기', 즉 '핵 선제사용권'을 고수해왔다. 이것은 미국의 뒤흔한 '협의 오만'의 표지였다.

이북에 대해서만은 미국은 언제나 핵공격을 가하겠다는 미국의 오만은 미국 대통령, 장관, 군인들의 다양한 발언들 속에서 여지없이 드러났었다. 미국은 베트남 전쟁 패배 이후 높아진 한반도에서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이해를 사수하기 위해 미국 대통령 포드는 "우리들은 강력한 전략력, 전술적 억지력(핵병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핵병기는 당연히 강태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 유연한 사고 방식아래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핵선제공격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으며 그 직후인 1975년 6월 25일, 미 국방장관 슬테인저는 기자회견에서 이라 "북한의 목표를 전술핵병기로 공격할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1975년 7월 대통령 포드는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을 상정하고, 그 때에는 "재래식 전쟁에서도 2차대전 후 처음으로 핵병기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공언하였으며, 당시 국방장관 폼스페드(지금 다시 국방장관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자) 역시 "한국에서 유사시에는 핵병기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1976년 2월 9일)고 말했으며 미 국방성에서는 "핵의 선제공격", "평양에 핵을 투하하라"는 발언들이 쏟아졌으며 "핵병기가 배치되어 있는 지역에는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하면 핵병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1977년 미국 대통령 카터는 말했다.

80년대로 들어서 이러한 핵공격 위협 발언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배치도 늘어난다. 미국 육군참모총장 에드워드 마이어는 서울에서 기자회견(1983년 1월 23일)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북한에는 우리가 아는 한 소련이나 중국 또는 자체의 핵무기·미사일이 없다.
- 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에 배치된 미국 핵미사일의 발사는 그 국가들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 그 때문에 유럽에서의 미국 핵미사일의 사용에는 제약이 있다.
- 그러나 한국에 배치된 핵미사일 발사 여부의 기본적 판단과 권리는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그 판단과 결정을 미국(과 한국)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1980년대 한국에는 건물은 파괴하지 않고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미국에 의해 '깨끗한 폭탄'이라고 불리우는 '악마의 병기' 중성자탄용 렌스 미사일이 배치된다. 미 국방성과 주한미군 사령부는 1986년 10월 14일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지상전투 지원을 위해 미국 내의 렌스 미사일 1개 포대를 수개월 내에 한국전선에 배치키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계획을 입안한 코헨이라는 자는 한반도에서 중성자탄의 사용은 서유럽의 경우보다 유리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으며 다른 미국 당국자 역시 "중성자탄을 사용할 가능성은 유럽보다는 더욱이 될 수 있을 것이다"(미 국방성 대변인 웰즈, 1981년 8월 11일)고 공언하였다.

핵무기를 갖지 않고 있는 조선에 대해 이처럼 미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핵선제 공격권'을 가지고 뽐임없이 협박했던 것은 북에 대해 '죽는 권리'만 가지라는 것과 같은 말이었다. 한편 미국은 대북 핵선제공격 발언을 반복하면서 핵전쟁 도발의 시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이러한 협박을 구체화하여 실천한 것이 미국의 한·미 공동 팀스피리트 훈련이었다. 1991년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동원했던 규모의 핵군사력을 그대로 휴전선 바로 남쪽 육지와 바다와 공중에서 전개한 연례 핵전쟁 훈련이 바로 팀스피리트 훈련이었다. 이제 핵선제공격 훈련이 팀스피리트 훈련에 대해 알아보자.

2. 한반도에서 미국이 벌였던 대북침략전쟁 훈련의 역사

1) 틱스피리트 훈련의 역사

(1) 틱스피리트 훈련은 언제 왜 시작되었나?

전쟁놀이할 놀이터가 사라지고 있었다

역전하 한국의 미항리가 세계 최대규모의 미국 사격훈련장이 되어버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1975년 바르샤바조약기구와 북대서양동맹의 동시 진영 35개국이 군사대결체제의 해체를 의미하는 전유립안전보장협력회의(CSCSE)를 헬싱키에서 발족시킨 선언(헬싱키 선언) 이후, 미국이 그 동맹국과 평화시 상황에서 1개 사단 이상의 병력을 동원하는 군사훈련, 그것도 매년 고정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은 지구상에서 없어졌다. 그 때문에 미국은 육·해·공군의 전쟁규모의 합동 핵 군사훈련을 매년 실시할 수 있는 구실과 장소와 대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복을 대상으로 하는 '틱스피리트 훈련'은 유럽 공산국가들의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상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전쟁규모훈련을 할 수 없게 된 1976년부터 시작된다.

베트남에서 뿔났고 이복에 화풀이; 이복을 핵무기로 선제타격하라!

이처럼 유럽에서는 더 이상 전쟁규모의 훈련을 할 수 없게되었던 사정 이외에 틱스피리트 훈련을 시작한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미국의 사회주의 및 민족자주세력의 봉쇄정책은 1950년대 세계 곳곳에서 군사동맹, 상호방위조약 등의 체결로 나타난다. 미국은 1951년 일본과의 안전보장조약체결, 1952년 4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3국간의 안전조약 그리고 8월에 필리핀,1953년 10월에는 한국, 1954년 12월에는 대만과 각각 군사동맹 조약을 맺는다. 뿐만 아니라 1955년 2월에는 반공 포위망으로서 동남아시아 집단방위조약기구(SEATO;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타이, 미국 등이 가맹했으나 1977년 6월에 해체)를 결성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봉쇄정책은 사회주의, 민족자주세력의 침투를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방어벽이 되는 일본, 한국, 대만, 필리핀 지역 내에서도 이들 세력들의 움직임을 막살하고 미국의 정책에 절대지지를 보내는 충직한 세력에게 경권을 담당 시켰겠다는 의의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미국의 의도는 미국이 세운 독재정권에 대항한 광범한 민중들의 자주, 자립, 반제, 반미 운동을 교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에서 일어났던 미완의 4·19혁명이었고 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강력한 투쟁이었다.

베트남에서 경외를 지 못한 전쟁을 벌이므로써 국제적인 비난이 미국에 집중 되었고 다른 한편 장기간에 걸친 과도한 전쟁비용으로 인한 달러위기가 조성되었고, 대규모 병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멸렬하게 성과를 내지못하여 국내에서도 베트남에서의 철수뿐만 아니라 해외주둔 미군의 철수 여론이 일게 되었다.

미국은 이러한 정치·경제적 위기를 1969년 닉슨의 '팍 독트린'을 통해 모면하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당시 미국이 처한 위기를 모면 하면서도 계속 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대응조치로서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자조(自助)'라는 명목으로 동맹국의 군사력을 증강시킨 다음, 미군과 동맹군을 공동작전체제 하에 확고하게 결속시킴으로써 미국의 효과적인 아시아 전략 수행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세계전략으로 구체화 한 것이 닉슨 정권 초기의 「1970년 외교 교서」인데 여기에서 미국은 ①전략핵미사일 체계를 정비하고 ② 기동력, 타격력을 강화한 미 군사력과 동맹국 및 추종국의 군사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강화한 미 군사력과 동맹국 및 추종국의 군사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미국의 핵무산 아래 세계 각지에서 공동작전태세를 확립하며(소위 '종합전력'구상) ③ 동맹제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을 밝히고 있다.

결국 미국은 사상 최대의 전쟁비용을 투입하고도 보잘 것 없는 무장력 밖에 갖추지 못한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에게 1975년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만다. 한국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이후 두 번째로 세계 최강 미군의 패배였다. 당시 미 국방장관 슬래전저를 비롯한 미 군부는 패배의 원인을 ①핵병기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무기 사용상의 제한② 노노이의 심장부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지역적 제한 ③지상군이 복위 17도선을 넘지 않는다는 정치적 제한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선제핵공격을 중심으로하는 보다 적극적인 무력개입노선을 주창하였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 방어"라는 개념이었는데 이 개념은 '북한의 심장부에 핵무기를 퍼붓는' 새로운 작전계획, '9일간의 전쟁계획'으로 구체화된다.

이 '9일간의 전쟁계획'은 한반도에서의 단계적 계획이다. 이는 박정희 정권에 의한 이른바 '북한의 남침 위협' 선전과 함께 미국의 선제핵공격 위협이 최고조에 달하던 1975년 6월 한미합동 제1군단 사령관 제임스 홀름스위드 가 입안하고, 8월 국방장관 슬래전저가 서울에 와서 승인을 한 계획으로서 그 내용은 이렇다. 먼저 전쟁개시와 함께 즉각 판도와 오키나와 동에서 B52전략폭격기를 포함한 공군력을 비무장지대 상공에 시간당 202기, 하루 24시간 1천 회 이상 출격시키고 공중 및 지상화력을 집중하여 5일 만에 '적의 기동력을 완전 제거'한 뒤, 나머지 4일간 지상 병력에 의한 토벌전을 전개해 섬멸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은 1976년부터 출범하게 된 틱스피리트 훈련으로 단순화 계획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전을 상정한 것이야 실증되었고 미국이 이야기하는 '적극적 방어'라는 것이 바로 '핵선제타격'이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해주었다.

(2) 틱스피리트 훈련의 규모

'틱스피리트' 미국-한국 3군 합동훈련은 1976년 6월에 시작하여 25년간 해마다 실시되어온 대북 핵공격·상륙작전훈련이다. 이 훈련은 미국이 1972년 이후 전세계에서 실시하는 동맹국가들과의 군사 합동훈련 중 그 규모가 최대이자 최상급이며, 이라크 공격전(1991년) 같은 실제 전쟁을 제외하면 유일한 전쟁급 핵 합동훈련이다.

또한 해마다 미국의 공격형 핵항공모함 2척을 중심으로 20여척의 핵장비 함대, B-52핵폭격기 편대와 각종 핵공격 전폭기 편대를 주공격력으로 하여 평균 20만 명의 미국-한국 육군 지상병력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최강력급의 대북 공격 훈련이다. 아래 표에는 80년대 중반까지 진행되었던 틱스피리트 훈련의 규모와 동원부대, 훈련 내용이 들어 있다.

기간	병력	미군의 주요 참가부대	주요 훈련 내용
1976.6.10~20	46,000명 미군 6,000명 한국군 40,000명		상륙작전
1977.3.28~4.13	87,000명 미군13,000명 한국군 74,000명	오키나와 주둔 제18전술전투항공단 오키나와 주둔 제9수륙양용여단 제1해병항공단, 제7함대(항공모함 미드웨이)	상륙작전, 지상공격훈련
1978.3.7~17	104,000명 미군 45,000명 한국군 59,000명	제25보병사단, 펜스미사일대대, 팜주둔 B-52편대, 제7함대(항공모함 미드웨이) 오키나와 주둔 제3해병 사단	해상기동훈련, 긴급출격훈련, 상륙작전, 비상활주로이착륙훈련, 도하훈련, 펜스미사일 발사 훈련
1979.3.1~17	160,000명 미군 56,000명 한국군 104,000명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제1해병항공단, 펜스 미사일대대, 제7함대, 팜주둔 B-52편대, 제25보병사단	상륙작전,대잠수함작전, 펜스미사일 발사 훈련
1980.3.1~4.20	145,000명 미군 42,800명 한국군 102,000명	제25보병사단,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알래스카 주둔 공군, 제7함대(항공모함 미드웨이)	도하작전, 해군기동훈련, 지상공격훈련, 상륙작전, 출격 훈련
1981.2.1~ 4.10	156,700명 미군 56,700명 한국군 100,000명	제25보병사단, 제7보병사단, 오키나와주둔 제3해병사단, 팜주둔B-52편대, 제7함대	상륙작전, 도하작전
1982.2.13~4.26	161,600명 미군 61,600명 한국군 100,000명	제25보병사단, 제7보병사단, 오키나와주둔제3해병사단, 필리핀주둔 미 공군, 제7함대(항공모함 미드웨이)	항공모함 기동훈련, 상륙작전, 도하작전, 화력시범훈련
1983.2.1~4.16	191,700명 미군 73,700명 한국군 118,000명	제25보병사단, 제7보병사단, 오키나와주둔제3해병사단, 필리핀주둔 미 공군, 제7함대(항공모함 미드웨이, 엔터프라이즈)	야외기동훈련, 상륙작전, 도하작전, 화력시범훈련, 기뢰전 훈련, 해상작전
1984.2.1~4월 중순	207,100명 미군 59,800명 한국군 147,300명	제25보병사단, 제7보병사단, 오키나와주둔해병대, 제7함대(항공모함 키태이호크), 알래스카 주둔 공군, 팜주둔B-52편대	기뢰전 훈련, 상륙작전, 도하작전,전략공중공중투하훈련, 전투기전투훈련
1985.2.1~4.30	209,000명 미군 62,000명 한국군 147,000명	제25보병사단, 오키나와주둔 특수부대, 오키나와주둔해병대, 제7함대(항공모함 미드웨이), 알래스카 주둔 공군, 팜주둔B-52편대	기뢰전 훈련, 상륙작전, 도하작전,전략공중공중투하훈련, 화학전 훈련
1986.2.10~4.25	209,000명 미군 70,000명 한국군 139,000명	제25보병사단, 제9보병사단, 오키나와주둔해병대, 제7함대(항공모함 미드웨이), 필리핀 주둔 공군, 팜주둔B-52편대	상륙작전, 공격작전, 해상작전, 비상이착륙작전, 지상공격훈련
1987.2.19~5월 상순	한국군 미군 합 계 약 200,000명	제25보병사단, 제9보병사단, 오키나와주둔해병대, 제7함대(항공모함 레인저), 필리핀 주둔 공군	상륙작전, 비상이착륙작전, 해상훈련, 해당군수지원훈련, 화학전훈련

강규개정 소위의 계획

- 1) 3월말까지
 - 지역별 강규개정 소위 꾸리기
 - 강규개정 소위의 구체적 계획 내오기
 - 첫모임(3월 29일) 진행하여 의의와 목표 구체적 계획 합의하기
- 2) 4월
 - 분공하여 전문 및 강령에 대해 구체적 고민하기
 - 전여대협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주제별 토론 진행
 - 필요시 정팅모임 진행함
 - 4월 말 두번째 모임 진행하여 전문강령안 내오기
- 3) 5월
 - 분공하여 규약 및 시행세칙에 대해 구체적 고민하기
 - 다른 자료도 참조하여 규약 및 시행세칙안을 내오기
 - 필요시 정팅모임 진행함
 - 출범식정도에 세번째 모임 진행하여 규약 및 시행세칙안 내오기
 - =>5월 말까지 1차 가안 내오기
- 4) 6월
 - 1차 가안을 토대로 학교별, 지역별 토론 거치기
 - 의견수렴 수합하기
 - 필요시 정팅모임 진행
 - 6월 말 모임을 진행하여 2차 가안 제출하기
- 5) 7월
 - 중상에서 검토하여 중상안으로 제출
 - 중순경 임시총회에서 확정하기

강규개정 소위위원 : 서울- 대경-
 부경- 남-

대경여대협 핵심일군 모임

일시 : 3월 30일 토요일 저녁 5시
 장소 : 영남대학교

- 1. 학습
- 2. 3월 총화
- 3. 중상보고 및 중앙총화
- 4. 4월 지침 발제 및 토론, 대경여대협 계획
- 5. 대의원대회 기획 및 토론, 준비
- 6. 모임을 2주에 1회 할데 대하여
- 7. 기타

대의원대회 기획안

0. 들어가며
 10년의 역사속에 전여대협이 빛난다!
 총회이후 3월을 총화하고 이후 투쟁을 결의하자!

- 1. 구체적인 의의와 목표
 - 1) 10기 한총련 의장님을 선출하고 10기 한총련 건설에 힘있게 함께 하자!
 - 2) 전여대협 이후 투쟁결의를 내오자!
 - 3) 전체일군들과 전여대협 투쟁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하자!

2. 기획 내용
 1) 여학일군 마당
 대상 : 여학일군 및 여학일군 지향하는 이들
 시간 : 1시간 30분 ~ 2시간
 내용 : 여학일군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추후 구체적으로 고민)

2) 본회의 때 성교육 강연
 대상 : 전체일군
 시간 : 1시간 30분 ~ 2시간

대경- 내용 : 기본적인 성에 대한 지식부터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내용으로
 (내용은 조금 변경될수 있습니다)

3) 전전거리
 대상 : 전체일군
 내용 : 전여대협 투쟁과제 내용으로
 영대곳곳 선전물 설치
 -투쟁과제 내용과 설문지를 함께 하여
 -의장님 선전내용

3. 대학별 의식화 과제
 -대의원대회 통큰 선전하기
 -전여대협 투쟁과제선전
 -의장님 선전

4. 대학별 조직화 과제
 -여학일군들 1차 조직화
 -전체일군 집중 조직화 (성교육 강연으로) =>중요!!
 -소모임으로 묶여있는 새내기 조직화

5. 대학, 지역에서의 준비흐름
 3월 30일 대경모임에서 의의목표 합의, 분공하기
 4월 7일 대학별 의식화, 조직화하기
 분공내용 실천하기
 8일 ~12일 영남대 선전 및 막바지조직화

6. 중앙준비흐름
 24일 기획안 토론
 29일 대학별 의견수렴
 대대 기획안 확정
 4월 9일 대학지역 의식화 조직화
 대경지역 간담회
 4월 12일 집단적 준비

총회평가

1. 8기 전여대협 총회 평가에 임하기에 앞서 평가를 제때 잘하자!!

- 2. 총회의 의의와 목표
 - 전국의 여학일군들의 결의로 8기 전여대협 의장을 선출하고 건설하는 자리이다.
 - 8기 전여대협 총노선에 대해 토론하고 확정하여 전여대협 사업과 투쟁을 결의하는 자리이다.
 - 3,4월 사업계획에 대해 토론
 - 영남대학교 및 대경총련과 함께하면서 전여대협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여가는 자리이다.

- 3. 의의와 목표에 맞게 잘 진행이 되었나?
- 4. 의식화 조직화 측면에 있어서

5. 행사내용에 있어서
 23일
 2시 대경총련과 투쟁
 7시 총회 개막식 및 의장선출, 의장용립
 10시 3,4월 사업계획 기초발제 및 토론
 12시 30분 국별 모임(정책국, 조직국, 연사국) / 그 외 의장님과 간담회

24일
 9시 지위별 총노선 토론
 11시 대구여성노조 강연
 1시 본회의 (전체 총노선 토론 및 확정) / 새내기 등은 영상물 시청
 3시 결의대회

-좋았던 것
 -아쉬웠던 것

- 6. 전체적으로 성과지점은?
- 7. 전체적으로 아쉬운 지점은?
- 8. 교훈지점을 찾자!